



주간 통일정세

2012-1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태양절(4월15일)' 앞두고 김정일에 김일성훈장(4/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령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주체혁명 위업을 즐기차게 전진시켜 태양민족 100년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주시고 선군 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김정일 동지께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을 맞으며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같은 날 김 위원장에게 '김일성상'도 수여함.

- **평양에 김일성·김정일 대형 모자이크벽화(4/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가 평양 장대재 언덕에 건립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 노동당 선전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 간부와 시민 6만여 명이 참석

- **北김정은, 인민극장·미술전시회장 시찰(4/10,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김 부위원장이 극장을 둘러보고 "아버이 장군님(김정일)께서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 왔고 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극장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며 극장을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평가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날 김 부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국가산업미술중심'에서 진행될 김 주석 100회 생일 기념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도 둘러봤다고 전했으며 시찰에는 리재일, 박봉주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 당대표자회서 김정일 '영원한 총비서' 추대(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11일 평양에서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당 총비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노동당 1비서 추대...당대표자회(종합2보)(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11일 평양에서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 것은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라고 밝힘.

● **김정은, 당대표자회 마치고 금수산궁전 참배(4/11,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1일 4차 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김 부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고모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차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당과 군대의 고위간부들이 함께함.

● **北김정은 당군사위원장·정치국상무위원 겸임(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11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통신은 "노동당 규약과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셨음을 선포했다"고 밝힘.
- 통신은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총비서'이고,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당'이며, 제1비서직을 신설하되 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 당을 대표함.

● **김정일, 核·미사일·생화학무기 개발 유연(4/12, 연합뉴스)**

- 작년 12월 급사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고 일본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이 고위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에 전함.
- 잡지는 이날 최신호를 통해 김정일이 유훈에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전함.
- 잡지에 따르면 김정일의 유훈은 "우리는 미국과 심리적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당한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일어섬으로써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유훈에서 김정일은 최대 맹방인 중국에 대해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장래에는 가장 경계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강제해온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하라... 중국에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



하기도 함.

- 아울러 김정은은 후계자인 아들 김정은을 떠받칠 간부로서 "노동당에선 김경희와 장성택, 최룡해, 김경옥을, 군에선 김정각과 리영호, 경제 분야에서는 최영림과 김창룡 등"을 거론했고 "당 군 보위사령부를 비롯한 중추기관이 김정은의 안전과 안녕을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을 명령함.

● **평양 만수대에 김정은 대형동상 제막(4/13, 조선중앙TV)**

- 북한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13일 오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대형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함.
- 김 위원장의 동상은 김일성 주석의 동상과 나란히 만수대 언덕에 세워졌으며, 동상 제막식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당·정·군의 고위간부와 수십만명의 평양시민이 참석

●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신설추대(종합)(4/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12월17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며 "김정은 동지를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역사적인 이 시각 최고인민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고 전했다.
- '공화국의 최고 수위'라는 표현은 국방위 1위원장이 사실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써 북한의 3대 세습은 완성됐고 당·정·군을 아우르는 '김정은 1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음.
- 앞서 노동당은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고사령관직만 갖고 있던 김 1비서를 당 제1비서,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했음.

● **北최룡해·김원홍 국방위에도 진출(4/14, 조선중앙통신)**

-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새로 국방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장(우리의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김원홍과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 공안기관의 수장들도 국방위 위원으로 선출됐음.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대의원을 보설했다"고 밝혔음.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김일성 주석의 4촌 매제인 리용무 차수, 오극렬 대장, 김영춘 당 부장(전 인민무력부장) 등은 국방



위 부위원장직을 유지했으며, 김원홍에 국가보위부 수장 자리를 내준 우
동측 국가보위부 1부부장은 국방위 위원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음.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방위 위원은 박도춘 당 비서(군수 담당),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전 군수공업부) 부장, 백세봉
2경제위원회(군수경제) 위원장,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등 7명임.

● **김정은 첫 대규모 軍인사...70명에 별(4/14,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
으며 13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70명의 군 장교들을 장성으로 진급시
켰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
-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박순환이 중장에 진급했고, 김용화, 장근필,
윤득수 등 70명이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와 국방위원회는 공동결정으로 김 주석 100회 생일을 1주일 앞둔 7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에게 인민군 차수
칭호를 수여한 바 있음.
- 이번 대규모 군 장성 인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군부 내에서 세대교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임.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대규모 중앙보고대회(4/14, 조선중앙TV)**

- 북한은 14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
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주석 100회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
회를 녹화방송 했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김일성 동
지의 탄생은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대통운이었으며 우리 인민
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일대 사변"이라며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강조
-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중앙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최영림 내
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
장, 김정희 당 비서 등이 자리했음.

● **北김정은, 인민군 무장장비관 시찰(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4일 김일석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개
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봤다고 조
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시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이 수행

● **北김정은, 군 열병식서 첫 공개연설(종합)(4/15, 연합뉴스)**

-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설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1비서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의 연설은 20분 정도 이어졌으며, 연설 중간마다 청중의 박수가 수차례 이어졌음.
- 김 1비서는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파란 많은 수난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웠다"며 "어제날의 약소국이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변신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고 말했음.

● **北, 김일성생일 대규모 군열병식으로 '자축'(종합)(4/15, 조선중앙TV)**

-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은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육해공군과 노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열병식을 벌였음.
- 북한이 인민군 창건 80돌(25일)이 아닌 김 주석 생일에 대규모 군 열병식을 진행한 데는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 인민군 열병식에 노동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가 참가한 것은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돌 경축행사에 이어 1년 6개월 만임.
- 2시간가량 진행된 열병식에는 김 1위원장 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비서,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태양절)인 15일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김 1위원장의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김경희 당 비서 등 고위인사들이 함께했음.

● **北선 미사일 실패 아닌 '자폭'이라 표현(4/15, 요미우리신문)**

- "북한에서는 누구도 미사일 발사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평양에 머물렀던 수카르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미망인인 데비 수카르노 여사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 데비 여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안 것은 당일인 13일 저녁이었으며, 여성 통역에게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자폭(自爆)했기 때문에 우주 전문가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음.
- 데비 여사는 "평양에서는 아무도 '실패'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음.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평양서 불꽃놀이(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15일 밤 8시부터 축포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를 벌였음.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주체사상탑에서 솟구친 축포의 불줄기들이 수도의 밤하늘을 밝게 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정은 동향

- 4/10, 김정은 부위원장,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 현지도 및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시찰(4.10, 중·평방·중통)
 -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 현지영접(인민극장) 및 리재일·박봉주(黨 제1부부장) 등 동행
- 4/11, 김정은 부위원장, 黨 제4차 대표자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1, 중통·중·평방)
- 4/13 김일성·김정일 동상 만수대언덕에 건립 제막식, 4.13 김정은 참석(4.13, 중·평방·중통)
 - 김기남(사회)·김영남(제막사)·최룡해·최태복·최영림·리영호·장성택 등 동상 제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3.4.9) 1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4.9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4.9, 중통)
- 김영남, 리영호(보고), 최영림,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최룡해, 이용무, 김정각, 오극렬, 현철해, 문경덕(사회) 등 참석
-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일성훈장'(1972년 제정) 수여(4.10, 중통)
- ※ 김정일, 1978·1982·1992년에 이어 '김일성훈장' 수여 받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관련 '군력강화 업적' 칭송(4.10, 중통/군력강화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
- 최룡해·현철해에게 '軍 차수 칭호' 수여, 黨 군사총·국방총 공동 결정(4.7字) 발표(4.10, 중통·중방)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4.13, 중통·중·평방)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새로 규정 및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헌법 수정 보충 및 최고인민회의 법령' 채택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4.13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참석下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4.13, 중통·중방)
- ① 헌법 수정보충, ②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③ 내각의 2011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 ④ 2011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2년 국가예산, ⑤ 조직문제 의안 결정
- 주석단: 김영남·최영림·최룡해·리영호·김경희·김정각·장성택·박도춘·김영춘·김국태·양형섭·강석주·이용무·현철해·김원홍·리명수·오극렬·김양건·김영일·태종수·김평해·문경덕·곽범기·김창섭·로두철·리병삼·조연준·변영립·김영대·류미영 및 최태복 개·폐회사(4.14, 중방)
-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4.13 인민군 지휘성원들 승진 인사 '명령 제009호' 하달(4.14, 중통·중방)
- 박순환 중장, 김용화·손경복 등 70명 소장
- 北, 4.13 로켓(광명성-3호) 발사 강행(07시38분55초,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및 "궤도진입 실패" 발표(4.13, 중통·중·평방·중앙TV·조선신보)
-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 4.14 김정은 제1위원장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4.15,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용해, 최용해, 이영호(개관사),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이용무, 김원홍, 오극렬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참가 및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단들 초대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14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4.14, 중통·중·평방·조선TV)



- 김정은, 김영남(보고), 최영림, 최용해, 이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사회),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이용무,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김창섭, 노두철, 이병삼, 조연준,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무력기관 일꾼들, 남승우(총련중앙상임위 부의장),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등 참가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관련 동정
 - 김일성父子 '태양상 모자이크벽화'(총길이 51m, 높이 16.6m) 준공식, 4.9 최영림·김기남·양형섭·문경덕 등 참가下 평양 장대제 언덕에서 진행(4.9,중방)
 - '국제축전', 4.11~16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될 예정/60여개국 350여명 참가/만경대·백두산밀영고향집 방문 및 기념식수, 국제연환대회 등(4.9,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3.29 은하수관현악단·평양피복공장 등과 119명 군인들에게 '김일성훈장' 수여(4.10,중통)
 - 백두산3대장군 모자이크벽화, 4.13 신의주시(평북)에 건립(4.13,중통)
 - 김일성 생일 북측 준비췌, 4.13 양형섭(위원장)·김영일(黨 비서)·김정숙(부위원장) 및 국제준비췌 공동위원장 등 초청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 개최(4.14,중통)
 - 제14차 김일성화축전, 4.13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앞에서 개막(4.13,중·평방·중통)
 - 노동신문 사설, '승리와 영광의 지난 100년사를 돌이켜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따라 김일성·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 독려(4.15,노동신문/위대한 주체의 태양의 역사는 천만년 흐를 것이다)
 - 당·정·군 및 각계층 인민들, 4.15 만수대언덕과 만수대창작사 김일성父子 동상에 헌화(4.15,중통)
 - 중국주재 北 대사관에서 4.13 中 공산당 중앙위 등 초청下 연회 개최(4.15,중방)
-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 4.15 김일성광장에서 진행(4.15,중·평방·중앙TV, 실황중계)
 -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최영림, 리영호, 김경희, 김국태, 최태복, 김기남, 김정각, 장성택, 김원홍, 현철해, 오극렬, 김영춘, 양형섭 등 참석
-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 축포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 김정은 등 참가下 대동강변에서 진행(4.15,중·평방·중앙TV, 실황중계)
- 北은 '△'광명성-3호' 발사는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첫단계 사업, △5년간 정지위성 개발에 착수, △은하-3호보다 더 큰 대형운반로켓 개발 시작' 보도(4.14,조선신보/조선의 우주계획은 계속 추진된다)



나. 경제

- **北, 중국인 금강산 유람선관광도 잠정중단(4/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4일 시작 예정이던 북한의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잠정중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의 관영 인터넷매체인 '지린망'은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이 지난 8일 오후 금강산 관광의 총대리권을 가진 연변천우국제여행사 측에 관광 연기를 전격 통보했다고 9일 전함.
 - 여행사 측은 북한이 25일까지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첫 출항 날짜는 북측과 협의를 거쳐 25일 이후 다시 확정될 것이라고 밝힘.

다. 군사

- **北 "위성 발사 모든 준비 완료"(종합3보)(4/10, 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위한 모든 조립과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광명성 3호 발사를 담당하는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류금철 부소장은 이날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성 3호가 미사일 실험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는 서방의 시각을 부인하며 이같이 말함.
 - 류 부소장은 예정대로 12~16일 사이에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그는 광명성 3호는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평화적 위성이며, 위성을 실은 1,2단계 추진 로켓은 예정된 궤도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류 부소장은 이어 "위성 발사는 북한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의미가 있다"면서 "위성 발사는 지역과 이웃 국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1단 로켓이 필리핀 육지로부터 160km, 2단 로켓은 190km 거리에 있는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며 "탄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로켓은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성 발사가 미사일 실험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임.
- **北 "장거리 로켓에 연료 주입 중"(2보)(4/11, 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백창호 소장은 이날 북한을 방문 중인 외국 기자들에게 "우리가 말했던 대로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 "연료 주입이 적절한 때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연료 주입이 언제 완료될지는 언급하지 않음.
- **北 "광명성 3호 궤도진입 실패" 시인(2보)(4/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3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이 발사됐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낮 12시3분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국영문 기사를 통해 "조선에서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가 13일 오전 7시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현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TV도 이날 낮 12시11분께 주체사상 세계대회를 녹화방영하다 긴급보도 형식으로 '광명성 3호의 궤도진입 실패'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전함.
- **北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4/13, 연합뉴스)**
 -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9시10분께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발사한 것은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답변만 한 뒤 전화를 끊음.
- **北로켓 발사 1~2분후 공중서 산산조각(종합3보)(4/13, 연합뉴스)**
 - 북한이 13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속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발사 1~2분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례적으로 위성 궤도 진입 실패를 인정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모를 불안정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음.
 -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다"고 발표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가 끝난 뒤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밤 11시(한국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규탄과 추가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
- **北 신형 미사일 공개 '로켓 실패 만회용?'(4/15, 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지난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한 장거리 로켓 실패 이후 공개된 것으로 미뤄 이를 만회하기 위한 대내외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북한이 이날 열병식을 실황 중계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직경 2m, 길이 18m 이상으로 사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고 있음.

● **北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ICBM은 아닌듯(4/15, 교도통신)**

- 북한은 15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탄도 미사일을 선보였으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평양에서 이날 펼쳐진 북한군 열병 행사에선 북한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ICBM은 등장하지 않았음.
- 양쪽 바퀴 8개가 달린 대형차량에 거치한 위장된 대형 미사일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다음으로 퍼레이드 말미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 신형 미사일은 추정 사정이 2천500km에서 4천km인 무수단 미사일보다 커 보였음.
-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익명의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 이 미사일이 미국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사정 6천km로 추정되는 ICBM이라고 전한 바 있음.

라. 사회·문화

● **북한 인구 2050년까지 2천600만 명 돌파(4/10, 미국의소리(VOA))**

-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50년까지 북한 인구가 2천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전함.
- DES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세계 도시화 전망 2011년 개정판'에서 2010년 북한 인구를 2천434만6천 명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이보다 8% 정도 증가해 2천638만2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DESA의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2010년 북한의 도시 거주 인구는 1천4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2%인데 비해 2050년에는 약 1천900만 명으로 도시인구 비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함.

● **北정치수용소 유아살해, 강제낙태 등 자행(4/10, 연합뉴스)**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15만 명 이상이 감금돼 있으며,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현지시간)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이날 발간한 '숨겨진 강제노동수용소(Hidden Gulag)'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 수감자 및 경비대원 60명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실상이 드러났다고 밝힘.
- 총 20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수용소에는 정치범의 자녀와 부모들까지 수감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탈출해서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강제로 낙태시키고, 유아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함.



- 아울러 북한 정치수용소는 지난 1950년대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인 '굴라그(Gulag)'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현재 15만~20만 명이 감금돼 있다면서 이를 촬영한 위성사진도 공개함.

● **北 인터넷망 추가...김일성 생일행사 홍보용?(4/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미국의 통신회사를 통해 외국의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는 북한이 미국에 기반을 둔 위성통신회사 'Intelsat'의 인터넷망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지난 5일 알게 됐다고 밝힘.
- 북한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인 '스타 조인트 벤처(Star Joint Venture)'는 그동안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내 주요 통신업체인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을 통해서만 외국과 접속해옴.
- 윌리엄스는 "외국에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 연결하려고 할 경우 대부분 차이나유니콤의 인터넷망에 연결되지만 지난 5일부터 Intelsat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함.
- RFA는 일본과 중국에 있는 서버를 빌려 '조선중앙통신' 등의 웹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북한이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돌을 맞아 북한 내 서버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했다고 전함.

● **北인권문제는 미·한·중 공동책임(4/13,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무관심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튿날인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게재한 첫 번째 사설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에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한 질타였음.
- WP는 "최근 모든 관심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집중된 가운데서도 수백명의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등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다른 부분을 조명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최근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가 개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세미나를 소개

● **北, 김일성 생일 맞아 학생들에 교복 공급(4/14,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대학생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학생들에게 교복이 공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 통신은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맞으며 조선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이 공급되고 있다"며 "수도 평양으로부터 북방의 두메산골과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각급 학교와 분교들, 상점들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새 교복을 받아 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육자들과 상업봉사자들의 감격과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고 있다"고 소개



- **北김정은, 재일교포 자녀 위해 교육비 지원(4/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재일 교포 자녀들에게 1억6천560만 엔(한화 약 23억2천만 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 통신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 재일동포 자녀를 위해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에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58차에 걸쳐 469억2천505만 엔(한화 약 6천5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미사일 발사장 촬영제한 없었다<교도>(4/9, 교도통신)**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외국 언론의 발사장 촬영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로켓 '은하 3호' 본체가 설치된 발사대 뿐 아니라 모니터링 시설인 관제시설 내부까지 공개했으며 사진 촬영도 거의 제한이 없었다고 전했으며 발사장의 총책임자인 장명진(46)이 "미국과 중국도 이 정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日항공사, 北 로켓 발사에 9편 항로 변경(4/9, 교도뉴스)**
 - 일본의 항공사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종료될 때까지 필리핀 해역 상공을 지나는 국제선 9편의 항로(航路)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필리핀항공, 北로켓 대비 12편 항로 조정(4/9, 연합뉴스)**
 - 필리핀항공(PAL)은 12~16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 일부 국제선 항공편의 항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함북 무수단리서도 위성발사 계획<교도>(4/9, 교도통신)**
 - 북한이 동창리뿐 아니라 무수단리 발사장에서도 위성을 발사할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장명진 총책임자가 '우주개발'과 관련 이번에 위성을 발사하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뿐 아니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도 위성을 발사할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통신에 의하면 장 총책임자는 "무수단리에서 위성을 발사할 경우 로켓 1단의 낙하지점이 육지가 될 수 있어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동쪽으로 발사할 계획임을 시사함.
- **美 "중에 北로켓 저지 압박 촉구"(종합)(4/1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해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함.
 - 놀런드 대변인은 특히 "중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또 "우리의 입장은 '하지 말라 (Don't do it)'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도발적이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한 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함.
- **北, 4·15 행사에 일본 인사 100명 초청(4/10, NHK)**
 -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맞아 일본에 초청 공세를 폈다고 NHK방송이 10일 보도함.
 - 10일 이 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오는 15일 열리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에 일본의 전 국회의원과 교류단체 대표, 국제관계 연구자 등 100명 정도를 초청하며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전 참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북단 10명은 9일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임.
- **佛, 북한 로켓 발사 포기 거듭 촉구(4/10, 연합뉴스)**
 - 프랑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로켓 발사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베르나르 발레로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이 로켓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16일 이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 준수와 발사 계획 취소를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 번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 **클린턴 "北미사일, 적절한 조치 취할 것"(4/10,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강행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평화롭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역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추가적인 발사를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계획 중단을 촉구함.
- **日, 北 미사일 발사 대비 비상태세 돌입(4/11, 연합뉴스)**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이라고 부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오후부터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외신기자들 평양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참관"(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참관을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들이 11일 평양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지구 관측과 통신을 비롯한 인민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과학연구를 진행하는 거점"이라며 "지휘소에는 위성 발사와 관측 계산 및 정보 보장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지휘통신체계, 컴퓨터망 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위성 관제에 필요한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소개함.
- **北 김계관 '이른 시일 내 만나자' 美에 서신(4/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 발표 직후에 서신을 통해 미국 측에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복수의 미 외교 소식통은 RFA에 김 부상이 지난달 20일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위성 발사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함.
 - 김 부상은 편지에서 북한이 이미 지난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위성 발사 계획을 미측에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방송은 전함.
 - 그러나 미 국무부 관계자는 12일 RFA에 김 부상의 서신에 대해 '개인적인 서신(private correspondence)'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언급할 게 없다"고 말함.
- **美·日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종합)(4/13, 연합뉴스; ABC 방송; CNN 방송)**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 직후 몇 조각으로 파괴돼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익명의 관리들 말을 인용, 12일(현지시간) 잇따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사



실패 사실을 확인함.

- ABC 방송은 이날 익명의 관계자들 말을 인용,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미사일이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긴급 보도함.
- CNN 방송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 직후 얼마 되지 않아 파괴돼 추락한 것 같다고 전함.

● **美백악관 "北미사일 실패..도발행위"(종합)(4/13,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로켓실패〉 EU "위험한 행위 심각하게 우려"(4/13,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13일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위험스럽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비판
-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실행한 위험스럽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음.
- 애슈턴 고위 대표는 "북한이 밝힌 (발사)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시도한 로켓 발사는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명시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北로켓실패〉 러 "새로운 대북 제재 반대"(4/13,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관련국들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러시아·중국·인도 3자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새로운 제재가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관련국들은 오직 외교·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못박았음.

● **美, 대북 식량지원 중단(종합)(4/14,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 미국은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벨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로즈 부보좌관은 또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위를 감행해 국제사회에 다시 도전한다면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 **美·中 외교장관, 전화로 북한 로켓 대책 논의(4/14,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3일(현지시간) 전화를 통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어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양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한 규탄을 위해 신중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에 대해 '북한과 관계를 활용해 우리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 조선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확대 방침(4/14, 산케이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조선총련 간부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으로의 귀국을 금지하는 대상자를 현재의 허종만 책임부위원장 등 간부 6명에서 다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오바마, 대선前 對北대화 보류할듯(4/14, 워싱턴포스트(WP))**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으로 미국 정부는 당분간 대북 강경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
- W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화·개입 전략(engage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꾸준히 진행했으나 이번 '도발'로 최소한 올연말 대선까지 추가 대화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특히 지난 2월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의 합의가 몇주일만에 파기된 것과 관련해 공화당이 적극적인 비판공세에 나서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 **김성환, 中외교부장과 '北 로켓' 전화 회담(종합)(4/15,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양 부장은 통화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위성을 발사하지 말도록 설득 했지만 북한 측이 발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 양 부장은 이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한중 양국은 모든 문제에 대해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 **日-中 외교부장, 北 로켓발사 대책 협의(4/15, 연합뉴스)**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14일 밤 중국의 양제츠(楊潔志<兼대신虎들여간簾>)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일본 외교부가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겐바 외무상은 25분간 진행된 전화접촉에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일본 외교부 관리는 전했다.
 - 겐바 외무상은 양 부장과의 통화에서 "일본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日,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검토(4/15, 요미우리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발로 대북 송금 상한액 인하 등의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 송금 규제와 북한 방문시 현금 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을 300만 엔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방문 시 10만 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나. 6자회담(북핵)

- **백악관 "北핵실험 강행時 도발 간주"(4/10,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도발행위(provocative action)'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핵)실험도



도발 행위"라고 경고함.

● G8, 北로켓 발사 계획 중단 촉구(종합2보)(4/12, 연합뉴스)

-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무기도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참석 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있는 회동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은 로켓 발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북한은 완전하고, 확증할 수 있으면서도 반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존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함.

● 美·日 비난·中 자제 촉구(종합2보)(4/13, 연합뉴스)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일제히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 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은 도발행위로 인해 고립을 심화시켰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무기와 선전용 과시를 위해 돈을 낭비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자체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직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으며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비록 로켓발사가 실패했다라도 우리나라와 관련국들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함.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이날 로켓이 발사되고 수 시간이 지난 후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기자회견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상황과 유관 각 당사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유관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 공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그러한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강조함.



- 헤이그 장관은 또 영국정부가 13일(현지시간) 오후 영국주재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이 미사일과 핵 보유 능력(nuclear capabilities) 개발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힘.
-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밥 카 외무장관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 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도발적이고 위협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3. 대남정세

● 국회 국방위, 北로켓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4/13,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결의안은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함.

● 李대통령, 北로켓발사 대응 키워드는 '절제'(4/14,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이후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되,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하지 않고 냉철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부처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뒤 정부 차원의 성명을 내는 것으로 초동 대응을 마무리했음.

● 北, 南총선 결과 뒤늦게 소개(4/15, 평양방송)

- 북한 매체가 15일 우리의 총선결과를 전하면서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패당'에 참패를 안겨야 한다고 선동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11일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기대했던 의석수를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명박 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전했다.
- 방송은 "서울과 광주, 경기도, 전라남북도 등 지역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새누리당을 압도한 것은 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여실히 확증해주었다"고 주장

- **북한기독교총연합회 21일 창립총회 열어(4/15, 연합뉴스)**
 - 북한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북기총)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종로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기총은 탈북민목회자연합회, 한국탈북민교회연합회, 탈북민선교단체 등 새터민 기독교단체 세 곳이 모여 구성한 연합체임.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핵확산 막은 독보적 존재는 이스라엘"(4/12)

- 지금까지 북한의 핵확산 시도를 차단한 유일한 나라는 의외로 이스라엘이라는 주장이 나왔음.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의 성능을 향상하는 '수직적 확산'과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수평적 확산'을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수평적 확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2007년 10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 공사 현장을 폭격한 것"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지원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과 필적할만한 수준으로 북한의 수직적 확산을 막으려는 역시 노력은 없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나 국제적 비난도 북한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의 노력이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오히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계획을 강행하게 된 빌미가 됐다"고 설명했다.
-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은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어떤 나라도 이를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나 미국이 이런 이유에서 북한의 계속된 국제 협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의 체제 동요 등을 우려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막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서 "이른바 '이스라엘 방식'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북한은 이웃 나라들의 두려움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선(先) 미사일 발사-후(後) 핵실험'이라는 과거의 패턴을 이번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06년에는 2개월여, 2009년에는 6주일의 간격을 두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어졌다"면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과거 2차례와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



확한 입장을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음.

나. 미·북 관계

● <美오바마 행정부 대북전략 실패 '논란'(4/10)>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으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비판론이 급부상하고 있음. 특히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극적인 합의'를 평가하던 당국자들도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북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사실상 '실패'를 시인하는 모습임.
-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을 조건으로 식량을 지원키로 한 '2.29 합의'는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득보다는 해가 됐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제재할 것이고,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핵실험을 강행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는 분석에서임.
-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어떤 정부도 이런 사태를 겪을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완벽한 실패"라고 말했음. 그는 "부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를 추구하다가 더 많은 미사일·핵실험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이는 로켓위기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실패"라면서 "사자의 꼬리를 처음으로 건드려본 북한의 새 지도자에게 앞으로 10년간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대북 협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는 "바깥에서는 '그래야 했다. 그럴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목적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면서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음.
- 또 다른 당국자는 "회담 당시 우리는 '우주 발사체(space launch)'가 협상 파기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들(북한측)도 이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회담 당시 '위성(satellite)' 발사 계획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당국자들은 "위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WP는 덧붙였다.

● "백악관, 美언론 北로켓발사 과잉취재 경고"(4/10)

- 미국 백악관은 이번 주 예상되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 언론의 과잉취재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정치전문 웹사이트 폴리티코의 달란 바이어스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9일(현지시간) 밝혔음. 바이어스 기자에 따르면 토미 비에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것



- (북한의 로켓발사)이 선전용임을 알기 위해 로켓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면서 "기자들은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평양 측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에게 북한에서 보도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를 제공했음. NBC방송의 리처드 앵겔, ABC방송의 밥 우드러프, CNN의 스텐 그랜트 기사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눈앞에 둔 상황에 대해 이미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음. AP통신은 상보를 전하고 있고 트위터에도 수시로 기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음.
 - 비에터 대변인은 미 언론의 취재열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북한 지도부에게 선전도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바이어스 기사는 "북한은 실제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면서 세계 각국에는 우주 탐사인 것처럼 속이고 있으며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에터 대변인이 나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 비에터 대변인은 "북한은 외국 기자들에게 시골지역을 찾아가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주 북한발 기사의 대부분이 미사일 발사에만 초점을 맞출 뿐 북한주민의 빈곤한 생활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있을 북한의 로켓 발사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취재 대상이라고 말함.
 -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는 "당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이며 이는 유엔안보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수년전 북한 지도층과 만난 리비어 전(前) 부차관보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북한 간 기존의 협약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가 패닉상태라거나 세계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는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비에터 NSC 대변인은 "예전에 봤던 나쁜 선전용 영화를 재상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 백악관 "北핵실험 강행時 도발 간주"(4/10)

-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도발행위(provocative action)'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핵)실험도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음.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행동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결정은 북한 지도부 차원에서 고립을 끝내고 국제사회에 편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을 상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국제 사회에 편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전방위 제재를 통해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됨.
- 카니 대변인은 이밖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폭넓게 공조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마찬가지로"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北로켓발사 앞두고 美서 北인권 이슈화>(4/10)

-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앞두고 미국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미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로켓 발사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이 민간 차원에서 집중 조명되는 분위기임.
-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AI) 미국 지부장의 저서 '숨겨진 정치수용소(Hidden Gulag)' 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 수전 솔티 북한인권연합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임. 또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 신동혁, 김영순 씨 등도 자리를 함께 함.
- 그레그 스칼라튜 HRNC 사무총장은 세미나에 앞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는 북한 정권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인권 사찰 허용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의적 굶주림, 가족 감금, 출생 억제, 유아 살해 등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해외 300인 목사단'은 10일 정오 워싱턴DC를 비롯한 전세계 50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와 기도회를 개최함.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해 결성된 목사단은 성명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관심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형제, 자매들의 구출에 관한 일"이라면서 "전세계 한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정보를 향한 국제적 항의와 압력을 행사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이밖에 WP의 동아시아 특파원을 지낸 블레든 하든은 11일 워싱턴DC 시내의 유명 서점 '폴리틱스 앤드 프로스'에서 탈북자 신동혁씨의 이야기를 담은 신간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amp 14)'의 출간을 기념하는 강연 및 사인회를 개최함.



● 클린턴, 北 추가도발 가능성 우려(4/11)

-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10일(현지시간) 美 해군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으나 추가 도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한국 정보 관리들은 2009년 사례처럼 북한이 로켓 발사 후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클린턴 장관은 북한과 다른 안보 문제들은 미국이 아시아에 계속 개입하도록 만든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들을 위기에 빠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군이 경쟁자가 없는 동맹망을 가진 사상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세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신흥 세력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클린턴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아시아에서 서구 이익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중국은 소련이 아니며, 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번영되고 평화로운 아시아 건설을 위해 부상하는 중국과 효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美태평양사령관 "北미사일 기술 우려"(4/11)

-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아시아와 미국에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새뮤얼 라클리어 美 신임 태평양군 사령관이 11일 밝혔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도쿄를 방문해 "그동안 북한이 점차 더 정교한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다"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결국 얻는다면 그들이 보유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미사일의 잠재적 범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과 지역에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북한이 점차 그런 기술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미사일 기술 추구를 계속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라클리어 사령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에 미군 주둔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뒤이어 태평양군 사령부로 발령났음. 그는 태평양 지역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며, 일 양국의 협력은 "미사일 방어 문제를 훨씬 넘어 정보공유, 사이버 영역, 상호작전능력 등 동맹을 개선하는 모든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클린턴 "北미사일, 적절한 조치 취할 것"(4/1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강행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평화롭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역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추가적인 발사를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계획 중단을 촉구했음.
- 그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와 유엔(UN) 등에서 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전방위 제재를 통해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겐바 외무상도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음.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최근 기울인 대화재개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미국,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의 발사를 막으려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여러 지역문제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시간은 북한 미사일 발사 계획에 할애했다"고 덧붙였다.

● 美 "北로켓은 도발.. 후속조치 준비"(4/11)

-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심각한 '도발(provocation)' 행위라고 거듭 비난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사일발사 중단 약속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카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동맹국들과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하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에게 설득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 등의 '역할'을 압박했음.
-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날 워싱턴DC의 피터슨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세미나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도록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데이비스 대표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의 메시지는 같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안정을 해



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음.

- 한편 미 정부는 북한 초청으로 로켓발사 준비 현장을 취재, 보도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음.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사의 취재는 자신들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북한이 이를 선전 목적으로 이용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광범위하게 취재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또 "분명히 뉴스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더 많이 취재하면 할수록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이는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토미 비에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로켓발사와 관련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백악관 "北, 발사중단 아직 기회 있다"(4/12)

-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향을 바꿔 재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음.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 강행에 따른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아직 북한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우리의 대응에 대해 미리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그는 그러나 "북한이 계획을 실행에 옮겨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분명히 무언가를 얘기할 것"이라면서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경고했음. 다만 군사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응을 할 것이고, 이는 구두대응(verbal response)"이라고 밝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음.
- 이어 카니 대변인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고, 주민들을 굶기면서 군사프로그램에 돈을 낭비해온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제의무를 지킴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보살피는 대안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음.
- 그는 이밖에 "북한이 발사를 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이 과거에 보여 온 행동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美, 북한 로켓 발사에 별 옵션 없다"〈NYT〉(4/12)

-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로켓 발사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선전 효과를 평가 절하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특히 지난 2월 말 중국 베이징의 북미 3차 고위급 대화에서 이뤄진 비핵화 합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비판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데도 안간힘을 쏟고 있음.
- 이와 관련, 미 고위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미국은



- 그동안 밝힌 대로 영양지원 중단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 로켓 발사가 국제 의무의 준수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데도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임. 이 당국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우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1784호)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임. 미국은 1784호에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땅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또 하나는 앞으로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추진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압박할 수단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미국은 추가 결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할 것으로 이 당국자는 내다봤음.
 - 오바마 행정부는 불과 6주 전에 이뤄진 북한과의 비핵화 사전조치 합의가 결국은 북한에 농락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임. 미 당국자는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양국간의 비핵화 합의를 파기하기 이전에 어떠한 지원도 북한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음.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밝히듯이 완전한 외교적 대화를 원한다면 2월의 합의문에 들어 있는 다른 사항들은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음.
 - 그럼에도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과거 행정부와 같은 뒷에 빠져들지 않았음을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타임스는 지적했음. 북한은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최대 후원국인 중국조차 존중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합의도 우습게 여기는 기존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기 때문임.
 -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는 기존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음. 3차 핵실험이 이뤄지면 미국은 다시 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를 모색할 수밖에 없음.
 -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 연말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외교 분야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이란의 핵협상 재개 등 두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음. 북한의 로켓 발사와 별도로 오는 1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1년간 중단됐던 서방권과 이란의 핵협상이 재개될. 오바마는 취임 이후 세계 핵무기 감축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음.
 - 따라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핵개발 의지를 재차 노골화하고 이란 핵협상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오바마 외교가 실패했다는 공화당 대선 지지자들의 공세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WSJ은 오바마 외교



정책의 성적표를 규정할 이들 두 가지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그의 재선가도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美 "로켓 발사로 대북식량지원 중단"(종합)(4/13)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가 12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은 이번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지원용 식량 선적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이번 로켓 발사로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 조건으로 약속한 24만t의 대북 식량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 <北로켓발사> 북미관계 급랭 불가피(4/13)

- 북한이 13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말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과거보다 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논의의 향배가 주목됨.
- 미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면서도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지키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스스로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같은 언급은 북한을 상대로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최근 정치권 인콰에서 부상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판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올 연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이번 사안이 외교정책의 중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취임 초부터 지향했던 '원칙 있는' 대북외교를 재차 강조한 셈임. 이에 따라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된 형태와 수위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정책 옵션이 거의 없다는 게 고민임.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규탄과 제재 등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다 금융·무역거래도 없어 이란, 시리아 등과는 상황이 다르고 대북 식량(영양지원)지원 중단,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모두 취했기 때문임. 실제로 뉴욕타임스(NYT)도 12일 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 특히 식량지원 등은 인도적 사안으로, 다른 이슈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 원칙을 밝힌 터여서 이를 계속 제재 수단으로 고집할 경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폭력사태와 이란 핵개발 문제 등이 겹쳐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답답한 현실임.
- 결국 미 정부는 일단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제재 수단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기로 중국을 거듭 압박하는 '원칙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규탄 성명을 내놓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기존 결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이미 오래전에 예 정돼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 당국은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대책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북한의 노 립수에 밀려드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조용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 美백악관 "北미사일 실패..도발행위"(종합)(4/13)

-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 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 백악관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준비 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지키고, 이웃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동시에 주장해 왔다"고 밝혔음. 또 "북한은 도발행위로 인해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무기와 선전용 과세를 위해 돈을 낭비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 기 개발은 스스로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음.
- 이밖에 백악관은 "북한은 국제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지키고, 주민을 먹여 살리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이웃들의 신뢰를 획득해야만 스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김계관 '이른 시일내 만나자' 美에 서신(4/13)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계획 발표 직후에 서신을 통해 미국 측에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음.

- 북수의 미 외교 소식통은 RFA에 김 부상이 지난달 20일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위성 발사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음. 김 부상은 편지에서 북한이 이미 지난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위성 발사 계획을 미측에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그러나 미 국무부 관계자는 12일 RFA에 김 부상의 서신에 대해 '개인적인 서신(private correspondence)'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워싱턴의 동북아 관련 민간연구소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이사장은 "데이비스 대표가 김 부상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었다"며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다시 협상장에 앉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음.

● 美, 북한 로켓 발사 사실 확인(2보)(4/13)

-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13일 오전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음.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음.

● 美, 대북 식량지원 중단(종합)(4/14)

- 미국은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음. 벨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로즈 부보좌관은 또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위를 감행해 국제사회에 다시 도전한다면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오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거부한다는 점과, 특히 북한이 도발적일 행위를 계속할 경우 추가 조치 준비에 나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미국 정부는 앞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베이징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24만t의 식량지원 계획을 취소할 방침을 경고했었음.

다. 일·북 관계

● 日항공사, 北 로켓 발사에 9편 항로 변경(4/9)

- 일본의 항공사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종료될 때까지 필리핀 해역 상



공을 지나는 국제선 9편의 항로(航路)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양대 항공사인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는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가 종료될 때까지 로켓의 2단이 낙하할 필리핀 부근 바다 상공을 지나는 국제선 9편에 대해 항로를 변경하기로 했음. 일본항공은 항로 변경으로 하루 4편의 비행시간이 5~20분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일본공수는 비행거리는 좀 늘어나지만, 비행시간표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음.

● 日 해군총장 "北 미사일, 모든 사태 상정해 대응"(4/10)

- 일본의 해상막료장(해군 참모총장)이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모든 사태를 상정해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음.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스키모토 마사히코(杉本正彦) 해상막료장은 이날 북한이 예고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음. 그는 3년 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2척이었으나 지금은 4척으로 증가했다고 최근 몇 년 사이의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언급했음.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궤도 영역인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에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배치했음. 또 오키나와(沖縄)와 주변의 섬 4곳,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3곳 등 모두 7곳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음.
- 앞서 통합임무부대(합참)를 지휘하는 항공자위대의 사이토 하루카즈(齋藤和) 항공총대사령관(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9일 다니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에게 북한의 미사일 파편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요격 태세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음.
-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공조해가면서 후속 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 "北 위성발사, 오키나와 관광·어업에 타격"(4/10)

-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로 일본 오키나와(沖縄)의 관광과 어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
- 10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가가와(香川)현의 5개 중학교와 오키야마(岡山)현의 3개 중학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로 오키나와 수학여행을 연기하기로 했음. 효고(兵庫)현의 한 고등학교는 수학여행지를 오키나와 주변 섬인 이시가키지마에서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札幌)로 변경했음. 이시가키지마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궤도 영역에 있음.
- 어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북한의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하는 오키나와 주변 해역은 4월 중순부터 참치잡이 시즌이 시작됨.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기간에는 어로 활동의 제약이 불가피해졌음.
- 현지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어업인으로서 참치잡이 시즌이 연 한차



례의 보너스 시기인데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발사 기간에 어선들에 어떻게 지시를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분노를 표시했음. 한 어부는 "생활이 걸려 있어 고기잡이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파편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고 불안해했음.

- 해운업에도 타격임. 북한 미사일이 상공을 지나는 영역인 이시카지마와 요나구니지마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업체는 미사일 발사일이 확인될 경우 그날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음.
- 일본의 양대 항공사인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는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가 종료될 때까지 로켓의 2단이 낙하할 필리핀 부근 바다 상공을 지나는 국제선 9편에 대해 항로를 변경하기로 했음.

● "北, 4·15 행사에 일본 인사 100명 초청"(4/10)

-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맞아 일본에 초청 공세를 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음. 10일 이 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오는 15일 열리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에 일본의 전 국회의원과 교류단체 대표, 국제관계 연구자 등 100명 정도를 초청했음.
-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전 참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북단 10명은 9일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음.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임. 시미즈 전 의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호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간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북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 방북단은 이날 평양으로 들어가 1주 정도 체류하면서 외국의 다른 방북자들과 국제회의 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임. NHK방송은 초청 외교를 통해 북한이 냉각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일본 정부는 핵개발과 피랍자 문제 등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북한 입국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음.

● 日, 北 미사일 발사 대비 비상태세 돌입(4/11)

-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이라고 부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오후부터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 앞서 총리실은 10일 각료회의에서 방위상과 재무상 등 국가 안전보장회의 구성원들에게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12일 아침 7시부터 각 부처에 대기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음. 자위대도 비상태세에 들어갔음. 스기모토 마사히코(杉本正彦) 해상막료장(해군 참모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태를 상정해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음.
- 일본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궤도 영역인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에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배치했음. 또



오키나와(沖縄)와 주변의 섬 4곳,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3곳 등 모두 7 곳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음.

- 통합임무부대(합참)를 지휘하는 항공자위대의 사이토 하루카즈(齋藤台和) 항공총대사령관(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9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에게 북한의 미사일 파편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요격 태세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음.
-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공조해가면서 후속 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 日총리 "北 미사일 발사, 안보상의 중대 도발"(4/12)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상의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음.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행한다면 유감이다"고 밝혔음. 그는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했던 노력이 후퇴할지도 모르는 만큼 관계국이나 국제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냉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조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결의안은 "일본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음.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의견을 재삼 무시한 폭거의 반복이다"고 비난했음.

● 日정부, 北 미사일 경계태세 돌입(4/12)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경계태세에 들어갔음.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2일,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 전에 관저로 출근해 "최후까지 (북한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음.
-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긴장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총리실은 주요 각료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기간에 부처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음.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노다 총리는 안전 확인과 정보수집,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관계 각료에게 지시할 예정임. 또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책과 제재 방안도 논의할 방침임.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긴급 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긴급 정보를 전국에 전달하는 '전국 즉시경보시스템(J Alert)'과, 총리 관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엠넷(Em-Net)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자치단체와 국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정비했음.



● 日 정부, 긴급 안전보장회의 소집(4/13)

-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음.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 오전 8시40분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발표했다.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으나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음. 그는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 미사일 낙하물의 일본에 대한 영향은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냉정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음.
- 다나가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도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1분 이상 날아올랐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영향이 일본에는 없다"고 확인했음.

● 日총리 "北 미사일 발사 용인불가...엄중 항의"(4/13)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음. 노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직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음. 그는 일본인 피랍자,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음.
- 중의원(하원)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해 북한의 고립화를 한층 심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일본 정부는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 발사를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라고 비판했음. 성명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유엔안보리가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北로켓발사> 日 "독자적 대북 제재 검토"(4/13)

-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로 했음.
- 후지무라 장관은 "미사일 발사 실패가 북한의 내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면밀히 주시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니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은 없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계속 경계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일본의 민주당과 자민당 등 여야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음.

● "日, 조선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확대 방침"(4/14)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조선총련 간부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으로의 귀국을 금지하는 대상자를 현재의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간부 6명에서 다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이에 따라 남승우 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5명이 재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일본은 재입국 금지 대상자의 확대 외에 북한에 대한 송금 상한액 및 방북 시의 현금 소지 상한액의 인하를 통한 자금 이동의 엄격화 등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조선총련 일부 간부의 재입국 금지 외에 모든 상품의 수출입 금지, 북한에 대한 송금이 300만 엔을 넘을 경우 보고 의무, 북한 방문시 10만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 의무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음.

● "日,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검토"(4/15)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발로 대북 송금 상한액 인하 등의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 송금 규제와 북한 방문 시 현금 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보고 없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을 300만 엔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방문 시 10만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재무성에 의하면 금융 제재로 인해 현재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송금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도 연간 약 5억엔 정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금융 제재의 실효성은 별로 없지만, 북한을 제재한다는 대외적인 메시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산케이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조선총련 간부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으로의 귀국을 금지하는 대상자를 현재의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간부 6명에서 다



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이에 따라 남승우 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5명이 재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라. 러·북 관계

● 러 "北 로켓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거듭 경고(4/10)

-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장이 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결정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예로 평가한다"고 밝혔음.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정치-외교적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당시 러시아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군사적 성격의 미사일이든 민수용 로켓 운반체든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로켓 발사가 민수용 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었음.
- 한편 러시아군 총참모부는 10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궤도를 이탈해 러시아 영토로 떨어질 경우 이를 요격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러 "궤도 이탈 北 로켓 요격 준비돼있어"(4/10)

- 러시아는 북한이 이번 주 중 발사할 계획인 장거리 로켓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 자국 영토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요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현지 군당 국이 10일(현지시간) 밝혔음. 러시아군 총참모부 관계자는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에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은하-3호' 로켓이 궤도에서 벗어나 러시아 영토로 떨어질 위험이 제기되면 러시아의 미사일방어(MD) 및 방공 시스템이 이를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당시 러시아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군사적 성격의 미사일이든 민수용 로켓 운반체든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로켓 발사가 민수용 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었음.



● 리 라브로프 외무, 北 로켓 발사 계획 거듭 비난(4/12)

-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했음. 주요8개국(G8) 외무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 뒤에야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자국 이타르타스 통신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발표했으며 누구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북한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 권리를 실현하려면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당시 러시아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군사적 성격의 미사일이든 민수용 로켓 운반체든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로켓 발사가 민수용 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임.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뒤이어 10일 현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결정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예로 평가한다"고 거듭 밝혔음.

● <北로켓실패>러시아 "北 로켓 발사 유감"(종합2보)(4/13)

- 러시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감"이라며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줄기찬 호소에도 강행된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위배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음. 성명은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공간 이용 권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취한 제재들이 취소된 뒤에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 외무부는 이어 "평화적 우주 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이용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이 국제협력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유엔 안보리 요구 사항 이행을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또 "러시아는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역 상황 안정화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조속하게 재개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중국·인도 3국 외무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끈질긴 호소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실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로켓 발사 실험 실패가 다른 나라에 대한 피해 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으면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떤 제한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음.
- 라브로프는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음.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당연히 해당 상황에 대한 안보리의 검토를 요구한다"면서 "그러나 안보리의 반응은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제재를 믿지 않으며 그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러시아·중국·인도 외무장관)는 한반도 핵 문제와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를 논의했다"며 "이 도전에 전적으로 정치·외교적 방법으로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우리는 (당사자들의) 최대한의 자제와 6자협상 재개를 호소한다"며 "이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협상 틀"이라고 강조했다.
-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대화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마. 기 타

● 힐 전 차관보 "北위성발사, 권력투쟁 산물 가능성"(4/9)

- 크리스토퍼 힐 전(前)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2월말의 북미 핵합의를 깨고 위성을 발사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음. 미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9일 '김일성 생일에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을 감추는 것'(Birthday launch masks North Korea's struggles within)이란 제하의 CNN 기고문에서 이같이 분석했음.
- 힐 전 차관보는 먼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위성을 발사기로 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24만t의 대북영양지원을 포기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접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음. 이어 미국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우방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 간 협력관계가 악화하는 게 아니라 보다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월말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의 3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를 깨고 위성을 발사기로 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전술의 일환이라는 분석에서부터 미국의 협상대응이 베이징 회담 과정에서 위성문제를 금지목록에 못 박지 못한 실수 등 다각적으



- 로 분석했음.
-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위성발사 상황이 야심 있는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인 장성택의 후원을 받고 있는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불만이 많고 오만한 군부 기득권층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북한 내부 권력층간 경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투쟁 속에서 북미 합의가 무산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이어 군사적 해결책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궤도를 이탈한 북한의 로켓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지 않은 채 우방국에 떨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미국은 우방국들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미국의 핵우산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방국의 우려도 없앨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음.
 -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은 한국과 정치적,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한국인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악동이 아니라 미국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긴밀한 공조를 하는데 실패했었다"고 지적했음.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힐 전 차관보는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야 하며, 역내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음.

● 佛, 북한 로켓 발사 포기 거듭 촉구(4/10)

- 프랑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로켓 발사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베르나르 발레로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이 로켓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16일 이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 준수와 발사 계획 취소를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프랑스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 번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 <유엔 안보리, 北로켓 발사 당일 소집될 듯>(종합)(4/10)

-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됨. 결론부터 말하면 안보리는 로켓 발사 당일 소집돼 늦어도 열흘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 일을 쏘았을 때에도 당일 소집됐음. 특히 2차 핵실험에 앞서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 4월5일은 일요일임에도 곧바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 8일 만인 13일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 관련 통제



- 품목의 최신화(업데이트)와 제재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 안보리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됨.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위기"라고 판단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이번 달 안보리의 순번제 의장국을 미국이 맡고 있다는 점도 발 빠른 대응을 예견하게 하는 대목임.
 -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림.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 '결의'(resolution)와 바로 아래 단계의 의사 표현인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 3가지가 있음.
 -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함. 의장성명은 15개 이사국의 합의가 이뤄져야 함.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함. 언론성명은 의장국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임. 결의와 의장성명은 내용의 수위에 따라 변용이 가능함. 예로 들면 제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도 있을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때 안보리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고심 중이며, 조만간 유엔대표부에 훈령을 내려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2차 핵실험 때 채택된 결의 1874호가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관련 자산 동결, 관계자의 여행금지 등 가능한 대부분의 제재를 담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는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유엔의 한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추가로 제재할 만한 마땅한 것이 별로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결의보다는 선명한 의장성명이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한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이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중국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진작 밝혔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음. 지난 주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안보리 무대에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할지는 의문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중국은 안보리의 결정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6자회담 재개 시점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급적 미묘한 표현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유엔 소식통들의 설명임.
 - 따라서 미국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톤의 성명을 주장하면서 문안조율 과정이 진통을 겪게 된다면 안보리의 조치는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3건의 결의와 4건의 의장성명, 2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음. 2006년 미사일 발사 때에는 결의 1695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의 지원 방지 및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음. 1차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 제재의 이행을 결정하고 제재위원회를 구성하는 1718호를, 2차 핵실험 이후에는 기존 제재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키로 하는 1874호를 각각 채택했음.

● 北 로켓에 연료주입..한미 로켓 추적체제 돌입(4/11)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운반할 은하-3호 로켓에 연료를 주입함에 따라 로켓 추적체제에 돌입했음.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당장 12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고 정보분석 요원을 증강하는 등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미측은 주일미군에 배치된 RC-135(코브라 불) 정찰기를 서해 상공에 투입, 미사일 발사시설을 정밀 감시 중임. RC-135 정찰기는 적외선 센서와 광학카메라 등 지상 시설을 감시하는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음.
- 우리 군도 세종대왕함과 울곡이이함 등 2척의 이지스구축함과 대공 레이더를 갖춘 구축함 5척과 구조함 1척 등을 서해상에 파견해 장거리 로켓 탐지에 돌입했음. 정부 당국자는 "2009년 발사 때는 1단계 로켓이 8조각으로 파괴돼 해상에 떨어졌다"면서 "이번에도 1단계 로켓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바다에 떨어질 것으로 보여 수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해군은 1단계 로켓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산반도 서쪽 공해 주변에 함정을 배치해 로켓 파편을 최대한 수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동향을 평가하고 한미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합참 관계자는 "한미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상호 긴밀히 협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북한이 사용하는 액체 연료는 추진력을 높여주는 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주입 후 3~4일이 경과하면 로켓 추진체 기관을 부식시키게 됨. 연료 주입은 빠르면 4시간가량 소요됨.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 행사 일정을 감안하면 14일에 발사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발사장 일대의 날씨가 결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북한이 예고한대로 12일에도 발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 G8외교장관회의, 北관련 성명낼 듯(종합)(4/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주요 8개국(G8) 회원국들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G8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G8 회원국)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강력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사일시험 중단을 약속한 지 몇 주 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중국해 상공으로 발사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8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시리아, 북한, 이란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냐는 질문에 "내일 오전 회의를 끝내면서 클린턴 장관이 공개석상에 나올 때 의장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것에 대해 "그것은 북한의 내부적인 일"이라며 논평을 피했다.

● 스페인 하원 외교위원장, 北 위성발사 포기 촉구(4/12)

- 스페인 하원의 조셉 A. 두란 외교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성 발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대사 오대성)에 따르면, 두란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 카탈루냐통합당의 원내 대변인이기도 한 두란 위원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개방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란 위원장은 "약 8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위성 발사 비용은 북한의 빈곤 퇴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한반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로켓발사> 美·日 비난·中 자제 촉구(종합2보)(4/13)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일제히 비난했다. 이들 나라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거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중전처럼 각 당사자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 ▲미국=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



- 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악관은 이어 "북한은 도발행위로 인해 고립을 심화시켰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무기와 선전용 과시를 위해 돈을 낭비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자체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밖에 백악관은 "북한은 국제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지키고, 주민을 먹여 살리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이웃들의 신뢰를 획득해야만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 일본 정부는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직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중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노다 총리는 관련 당사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과 함께 내각에 정보 수집을 독려한 바 있음.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비록 로켓발사가 실패했다라도 우리나라와 관련국들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음. 후지무라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오전 8시40분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발표했다.
 - ▲중국= 중국 정부는 각 당사자에게 냉정과 자제 유지를 촉구하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음.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이날 로켓이 발사되고 수 시간이 지난 후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상황과 유관 각 당사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음.
 - 류 대변인은 "우리는 유관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 공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류 대변인의 이 발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와 관련, 중국에서 나온 첫 번째 공식입장임.
 - 앞서 중국은 지난 10일에도 모든 당사국에 자제력을 발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음.
 - ▲러시아= 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논평했음.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군사용이든 민수용이든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음.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 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편 러시아는 우주공간 관측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면밀히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총참모부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로켓 추락 경고 및 우주공간 통제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로켓이 궤도를 이탈할 경우 (러시아 영토인) 쿠릴열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영국·독일=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그러한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헤이그 장관은 또 영국정부가 13일(현지시간) 오후 영국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이 미사일과 핵 보유 능력(nuclear capabilities) 개발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독일의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음. 베스터벨레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는 국제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톱 카 외무장관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음. 길라드 총리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질랜드의 머레이 맥컬리 외교장관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지하기로 합의해놓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비난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각 당사자에게 자제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음.
- <北로켓발사> 北에 충격 줄 추가 제재 가능성은(4/13)
-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현지시간) 밤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해 나올 조치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영양(식량)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미국의 대응 방침도 이미 예고된 것이어서 북한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가 국제 의무의 준수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음.
 - 유엔 안보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북 조치는 안보리 결의(resolution),



안보리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 3가지 형태가 있음. 하지만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과 관련해 등으로 대량 살상무기 거래 금지, 자산 동결, 관계자 여행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음. 이미 할 수 있는 제재는 대부분 동원했다는 의미임. 이에 따라 이번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 1874호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기존 제재를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장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있음.

- 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지난 2월의 북미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영양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역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이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킨 것처럼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외 자금을 중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 이런 방안의 실효성도 미지수로 알려졌음. 미국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음.
-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를 하려면 중국을 통한 우회적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의중대로 움직여 줄지는 의문임. 유엔의 한 외교관은 "중국이 발 벗고 나서주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음.
-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필요해 국제사회는 고심하고 있음.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임.

● G8, 北로켓 발사 계획 중단 촉구(종합2보)(4/13)

-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무기도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했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참석 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있던 회동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은 로켓 발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음. 이들은 또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면서도 반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존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2005년 6자 회담 합의에 부합해 "비핵화로 나가려면 완전하고 반복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장관들은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당국



에 "납치자들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음. 이와 관련해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은 국제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음. 그는 G8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장관들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G8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고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약속을 지키고, 일련의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대한 이익을 공유했으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 클린턴 장관은 특히 "6자회담 참가국과 G8 회원국들은 북한이 발사 계획을 강행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명확하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다'는 해당 문구를 낭독한 뒤 "이 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북한의 선택은 분명하다. 평화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에 가까이 다가서 이익을 얻느냐, 아니면 압박과 고립에 계속 직면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4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의 외교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런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유엔 차원의 후속조치 논의가 즉각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한편, 클린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세계은행 차기 총재로 지명된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을 언급하며, "그는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훌륭한 공직자"라면서 "그가 총재로 지명돼서 아주 기뻐다"고 말했음.

● <北로켓발사> G8, 北 비난... "적절한 조치 취할 것"(4/13)

-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이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새로운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음. 외교장관들은 이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음.
- 앞서 이들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몇 시간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 G8 외교장관들은 새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나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로 이



루어진 G8은 새로운 성명에서 유엔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검토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안보리 "北로켓 개탄" 대응조치 계속논의(종합2보)(4/1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했다"(deplored)고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밝혔음. 안보리 의장인 라이스 대사는 이날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개탄했다"고 말했음.
- 라이스 대사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보리의 책임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 조치를 내놓기 위해 회원국들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조치를 취할지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음.
-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서 북한 로켓 발사와 실패가 기존 결의의 위반이란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대응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안보리 조치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 중국이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함.
- 유엔 주변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주말에도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활발히 진행, 이르면 내주 초중반께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우리 정부와 미국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단호한" 조치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논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의결의 형식보다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고, 이를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조기에 문서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했음. 이 자리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인도 등 주요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요지로 그간 자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 내용을 재확인했음.
- 중국은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된다는 우려를 같이 했음. 특히 "로켓 발사가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이를 개탄하며 결과를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1차 회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라이스 대사의 입장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김숙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라이스 대사를 만나 "북한 로켓 발사는 실패와 무관하게 결의의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가 유지되는 가운데 회원국들끼리 활발한



개별 접촉을 벌였으며, 주말과 휴일에도 비공식 물밑대화를 계속하면서 대북 대응 조치의 문안조율 작업을 벌일 방침임.

● <北로켓실패> 中 변수 약화..의장성명 '유력'(4/1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실패에 따른 대응 조치의 논의를 결의보다는 의장성명으로 점차 좁혀가는 분위기임. 이 경우 시기는 7~10일 걸렸던 과거보다 빨라져 이르면 내주 초중반께 결과물이 나올 전망이다.
-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P-5)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에 부정적이라는 외적 변수와, 조기에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통된 인식이 이런 기류를 주도하고 있음. 중국이 13일(현지시간) "로켓 발사가 결의 위반이고 이를 '개탄'(deplore)하며 결과를 위해 계속 논의기로 했다"는 안보리 브리핑 문안에 반대하지 않은 점도 조기 의결을 예상케 하는 대목임. 안보리 대응조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중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셈임.
- 한미 양국은 이번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최대한 "신속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초를 공유하고 있음. 이 3박자를 갖춰야만 대북 경고 메시지의 임팩트가 극대화된다는 판단에서임. 이렇게 되려면 결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장성명이 쉬움. 결의는 가장 강한 형태의 의결이지만 통상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림. 형식을 고집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임.
- 로켓에 실패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또 다시 안보리가 소집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때를 대비해 외교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미국도 두 차례나 무산된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 다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단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다른 차원의 접근이지만 이번에 괜히 무리하게 결의를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임.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임.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결의의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결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의장성명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임. 양국 사이에는 북한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정설임.
-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내지 않은 유일한 상임이사국임. 러시아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성명에서 안보리의 논의를 요청하면서도 새로운 결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그러나 이들 두 나라도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모두 찬성했다는 점에서 의장성명까지 반대할 명분은 없다



- 는 게 안보리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임.
- 이밖에 로켓 발사가 참담하게 실패하면서 국제사회의 분노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도 결의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임.
 - 우리 정부와 미국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이를 '규탄'(condemn)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조기에 문서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김숙 주유엔 대사는 14일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가장 강한 것이 좋지만, 그릇보다는 그릇 속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결의나 의장성명이나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음.
 - 안보리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인 이날도 활발한 양자 및 다자 접촉을 이어갔으며, 휴일인 15일도 비공식 물밑대화를 계속하면서 문안조율을 시도할 방침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국방장관 "北 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4/10)

-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가 중대한 도발이리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7시(한국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파네타 장관 부임 이래 한미 국방장관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네 번째임.
-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리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음. 두 장관은 작년 12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에도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공조방안을 협의한 바 있음.

● 美경기회복·北리스크에 원·달러 환율 급등(종합)(4/12)

-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 '광명성3호' 리스크가 겹친 탓에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을 돌파했음. 12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9시30분 현재 전날보다 4.8원 오른 1,144.4원을 기록했음. 이날 환율은 2.9원 오른 1,142.5원으로 출발했음.
- 외환시장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평가 보고서 '베이스북'에서 미국 경제가 최근 '보통' 또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하며 달러 약세를 제한한데다 중국 경기성장 둔화와 배당 및 북



한편 관련 우려가 완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로켓발사> 주미대사관 비상체제..美당국과 협의(4/13)

- 주한미국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미국 관계당국과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과 실시간으로 접촉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며칠 전부터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였으나 발사가 현실화한 만큼 대사관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하지 않고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 특히 지난달 부임한 최영진 신임 주미대사는 이날 대사관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과 직접 전화 통화하고 양국 정부의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준국 정부공사도 백악관, 국무부의 외교채널을 통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후속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 주미대사관은 아울러 북한이 이날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당분간 비상근무를 유지하면서 본국 외교통상부와 국무부 등 미 관계당국을 연결하며 대책의 숙의한다는 방침이다.
-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미 정부 측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에 관한 사전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 정부가 미리 파악을 했는지, 그랬다면 대사관이 아니라 직접 본국으로 연락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北로켓발사> 한미 외교장관 전화 통화(4/13)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긴급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양국 외교 장관이 10여 분간 통화했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한 것 같다는 데 대해 양국이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패했어도 (북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논의한다는 당초 방침을 그대로 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국 외교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해 차분하되 단호한(calm and resolute) 태도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김성환, 中외교부장과 '北 로켓' 전화 회담(종합)(4/1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오후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화 통



- 화를 갖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양 부장은 통화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위성을 발사하지 말도록 설득했지만 북한 측이 발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양 부장은 이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한중 양국은 모든 문제에 대해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로켓발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고, 또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김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영향력 행사와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했음.
 - 김 장관과 양 부장간 통화는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25분간 진행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부장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 당일인 13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데 이어 이날 김 장관과도 전화 회담을 가진 것임.
 - 신화통신은 양 부장이 이들과의 전화에서 "중국 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모든 국제 문제에서 접촉과 조정을 중시해 왔으면서 6자 회담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 영국, 호주, 필리핀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갖고 북한 로켓발사 문제 관련해서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합의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관료·의원 대거동원 "독도 일본땅" 집회(종합)(4/11)

-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11일 도쿄 한복판에서 열렸음. 이 행사에는 처음으로 정부 관계자와 총리 측근이 참석했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노골화했음. 일부 우익 의원은 "독도를 무력 침략했다"며 한국에 자위권 발동을 거론했고, 독도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망언도 나왔음.
-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는 이날 오후 도쿄 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열었음. 시마네 현민회의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이고, 스하마 시게타쓰(洲兵繁達) 시마네현 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음. 이 집회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아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음.
- 도쿄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임. 이날 집회에는 시마네현과 정치권, 정부, 보수단체 등에서 약 800명이 참석했음. 헌정기념관은 도쿄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음. 정부 인사로는 아마구치 쓰요시(山口祐) 부대신(차관)과 나가시마 이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참석해 집회에 힘을 실었음. 정부 관료와 총리 측근이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회의원은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전 방위상과 사회민주당 아마우치 도쿠신(山内徳信) 국민운동국장 등 8명이 내빈 자격으로 인사를 했고, 별도로 여야 의원 50여명이 직접 참석했음. 다함께당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内文城) 정책조사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고, 히리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어나라 일본당 대표도 "다케시마를 찾으려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했음.
 - 참석자들은 민주당 이치카와 전 방위상이 "한국이 일본의 인접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일치단결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에는 아유를 퍼붓기도 했음.
 -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오늘 집회를 계기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시마네현의 주장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국민에게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라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아마구치 부대신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서 "단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끈기 있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발언했음. 그는 행사후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도 도쿄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석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 설치 요구 등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음.
 - 시마네 현민회의는 2006년부터 해마다 2월22일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자 도쿄에서 집회를 열면서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의 출석을 요구했음. 외무성 부대신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측근 등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반발도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올 들어 고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행사에 관료를 참석시킴으로써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행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과 개입을 예고했음.



● 日 방위성 "한국과 北 미사일 정보 공유 검토"(4/15)

- 일본 정부가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음.
- 이 통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의 와타나베 슈(渡邊周) 부대신(차관)은 15일 오전 기자단에게 "한국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이 독자적으로 파악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역사적 생각(반감)이 있다"고 말해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음.
- 일본은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차적으로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에 의존하고 있음. 와타나베 부대신은 "막대한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일본도 독자적으로 (조기경계위성)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정보를 한국과 미국에 비해 20분 정도 늦게 발표해 위기 대처에 문제를 보였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음.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신속하게 받았으나 이의 진위를 자체 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느라 발표가 지체됐음.

라. 미·중 관계

● 美 "中에 北로켓 저지 압박 촉구"(종합)(4/10)

-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우리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에 이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해 (북한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그는 아울러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북한의 계획에 반대하고 이런 행동이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입장은 '하지 말라(Don't do it)'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나쁜 생각(bad idea)'으로, 매우 도발적이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한 뒤 "이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 그는 특히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똑같이 나쁜



것"이라고 밝힌 뒤 구체적인 관련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음.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행동도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또 북한이 외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최근 며칠 동안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계획을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이 발사 강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그는 또 "그들은 분명히 과거에 지하 핵실험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problematic)"고 지적했음.
- 한편 AP통신을 비롯해 CNN방송, 폭스뉴스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날 북한발 현지 보도를 통해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고 주요 뉴스로 보도했음.

● 美·中 외교장관, 전화로 북한 로켓 대책 논의(4/14)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13일(현지시간) 전화를 통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이 어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양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한 규탄을 위해 신중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에 대해 '북한과 관계를 활용해 우리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리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클린턴 장관은 최근 열린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 미국 정부가 이들 국가에 '목소리 통일'을 압박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됨.
-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관련, "우리는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음. 특히 그는 "우리는 영양지원을 포함해 어떤 수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의향이 없다"면서 "이것(식량)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갈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이(로켓 발사)는 '계약파기(deal breaker)'로, 이런 행동 패턴이 계속되는 한 이(식량지원)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음.



- 이밖에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의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보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과거에 북한의 악행은 패턴이 있었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마. 미·일 관계

● 日방위상 "오키나와 美해병 8천명 해외 이전"(4/10)

- 일본의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이 10일 오키나와(沖縄)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8천명 이상이 해외로 이전된다고 밝혔음. NHK 방송에 의하면 다나카 방위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주일 미군 재편계획과 관련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 가운데 8천명 이상이 해외로 이전하고 약 1만 명이 남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과 일본은 해외로 이전하는 8천여 명 가운데 4천700여명은 괌으로 이전하되 나머지 3천300여명은 호주의 다윈 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다나카 방위상은 오키나와의 미군 가테나(嘉手納) 기지 이남에 있는 5곳의 미군 시설 반환과 관련 "현 시점에서 5곳 모두 반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日 노다 총리, 이달 29일 미국 방문"(4/12)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음. 노다 총리는 방미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주일 미군 재편, 북한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2009년 9월 일본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은 처음임.

바. 미·러 관계

● 클린턴 "러시아 때문에 아사드 정권 유지" 비난(4/1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하루 전 매릴랜드주의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러시아가 우리가 취하려는 모종의 건설적 조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아사드가 중동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클린턴은 "시리아에서 내전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11~12일 워싱턴에서 열릴 주요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최소한 시리아 유혈사태 피해 지역에 인도적 구호품만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의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



혔음. 라브로프 장관도 앞서 워싱턴 G8회담에서 미국 측과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서방 국가들과 일부 아랍 국가들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시리아 결의안 채택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방과 일부 아랍 국가들의 시리아 사태 해법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아사드 사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와 야권 모두의 폭력 행위 중단과 시리아내 정치 세력들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한 유엔 및 아랍연맹(AL) 공동 특사 코피 아난 전(前) 유엔사 무총장의 중재안을 지지하고 있음.

● "러 외무, 美 클린턴 국무에 부트 송환 요구"(4/12)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러시아인 무기 밀매상 빅토르 부트(45)의 송환을 요청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2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주요8개국(G8) 외무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클린턴 장관과의 회담에서 부트의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국민의 운명은 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됐든 우리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우리는 그가 러시아로 귀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라브로프는 "양국은 상호법률 적지원 제공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규정한 국제협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협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음.
-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테러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의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뒤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음. 미국 뉴욕 남부법원은 지난 5일 미국인 살인공모와 무기판매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에 근거해 부트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음.

사. 중·일 관계

● 中 중앙군사위 부주석 일본 방문 연기(4/10)

-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귀보슝(郭伯雄) 부주석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인해 일본 방문을 연기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귀보슝 부주석은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여름으로 연기했음.
- 귀보슝 부주석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기와 자신의 일본 방문 기간이 겹친다는 점 때문에 방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음. 교도통신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중국해 등에 배치한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책임자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



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 日-中 외교부장, 北 로켓발사 대책 협의(4/15)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14일 밤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일본 외교부가 발표했다.
- 겐바 외무상은 25분간 진행된 전화접촉에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일본 외교부 관리는 전했다. 겐바 외무상은 양 부장과 의 통화에서 "일본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양 부장은 중국도 북한의 위성발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평양과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겐바 외무상에게 전했다.
-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전화접촉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일본 측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 현재 미국, 일본 및 다른 외국들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번 로켓이 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아. 중·러 관계

● "러-중 해군합동훈련에 러시아 군함 6척 참가"(4/13)

- 이달 말 서해에서 실시될 러시아-중국 합동 해군 훈련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군함 6척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함대 공보실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태평양 함대 공보실은 이달 22~27일 서해에서 예정된 러-중 합동 해군 훈련 '해상 협력-2012'에 함대 기함(旗艦)인 로켓 순양함 '바라크'와 대함함정 '아드미랄 트리부츠', '마르샬 샤프슈니코프', '아드미랄 비노그라도프', 탱크선 '페첸가', 예인선 MB-37 등이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 양국 해군은 합동 훈련에서 해적 퇴치 및 대(對)테러 작전 능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공보실은 설명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아덴 만에서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양국 해군이 화물선이나 여객선 호송 및 인질범 구출 시범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중에선 대잠함 헬기 카모프(Ka)-27이 엄호 임무를 수행하고, 특수작전 훈련에는 태평양함대소속 해병대가 가세할 것이라고 공보실은 소개했다.



자. 일·러 관계

● 러 정찰기, 北 로켓 대비 日 구축함에 접근(종합)(4/11)

- 러시아 정찰기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동해에 배치된 일본 구축함에 접근했다가 긴급 발진한 일본 전투기의 경고를 받고 물러났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음.
- 방송은 일본 방위성을 인용, 러시아 대함 정찰기 '일류신-38' 2대가 하루 전 북한이 발사할 로켓이 궤도를 이탈할 경우 요격하기 위해 혼수섬 인근 동해상에 배치된 일본 구축함 '메코'에 접근했음. 이에 일본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정찰기 주변을 날며 경계 비행을 하자 일류신-38기는 항로를 바꿔 혼수 북쪽 노토 반도 지역을 통과해 북쪽으로 날아갔다고 방송은 전했다.
- 방송은 러시아 정찰기가 메코함에 장착된 다기능 이지스(Aegis)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자위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구축함에 접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음. 러시아 정찰기들은 올 3월부터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공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일본 해안 지역에 정기적으로 출현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한편, 일본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11일 태평양함대 소속 정찰기의 동해 비행은 일본 구축함 메코의 활동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음. 국방부 공보실은 "동부군관구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기는 일본해(동해) 해역에서 전투훈련을 위한 정기적 비행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음. 국방부는 이어 "전투 훈련 비행은 항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졌으며 다른 나라의 영공 침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차. 기 타

● 日 이시하라 "자위대 묶은 헌법 파기해야"(4/9)

- 일본의 대표적 우익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가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한 현행 헌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이시하라 지사는 8일 도쿄도에 주둔하는 육상 자위대 1사단 창립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음.
- 이시하라 지사는 헌법에 의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이 제한된 실태를 비판한 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점령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이 독립 후에도 지속되면서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헌법은 무효인 만큼 파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즉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 이시하라 지사는 "일본이 전후 큰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평화의 독'에 취해 사고방식이 안이해졌다"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기개가 없는 민족은 번영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는 "우리가 자위대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 나라 전체의 의사를 결집해 후원해야 한다"면서 "자



위대가 화급한 때 생명을 걸고 싸울 큰 비탕을 모두가 뜻을 모아 만들어야 한다"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일본의 보수우익 정치인들은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음.

● 日-英 총리, 무기 공동개발 합의(4/10)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무기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음. 노다 총리와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캐머런 총리는 10일 오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기와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일본이 미국 외의 국가와 무기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적어도 하나의 무기 개발 계획을 조기에 개시한다"고 명시했음.
- 일본은 작년 12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면서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이 가능해졌음. 일본이 영국과 무기 공동개발에 나선 것은 기술 이전에 엄격한 제약이 있는 미국에 비해 영국은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의 제약이 적기 때문임. 영국은 수출 관리가 엄격해 공동 개발한 무기가 분쟁당사국으로 이전될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됐음.
-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캐머런 총리가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무기 공동개발 분야와 관련 "헬리콥터 등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신문은 "일본의 차기 주력전투기 선정에서 영국이 참여한 유로파이터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에 패배한 이후 영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에 힘을 쏟을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보도했음.
-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금지한 2009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자제를 요구했음.

● <美, 러시아보다 더 많은 핵무기 실전배치>(4/10)

- 미국이 러시아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러시아는 3월 현재 1천492개의 전략핵탄두를, 미국은 1천737개의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발효된 러시아와 미국간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이행 차원에서 양국이 최근 맞교환한 핵무기 관련 정보에서 드러났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해 지난해 2월부터 발효된 새 START는 양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추가로 감축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양국이 교환한 핵무기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을 포함한 494기의 핵탄두 운반수단을 실



- 전배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812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미국과 러시아는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정보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타르타스 통신에 "지난 5일 국무부가 SLBM 트라이던트 미사일(Trident missile) 발사 실험 정보를 러시아 측에 넘겨줬고 같은 날 주러 미국대사관은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전했다.

● "러시아 지난해 무기수출 22% 이상 늘어"(4/11)

-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회사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를 통한 무기 수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22% 이상 늘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아나톨리 이사이킨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사장은 이날 "지난해 107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해 87억 달러를 수출한 2010년보다 20억 달러가 늘었다"고 밝혔음.
- 이사이킨 사장은 이 수출액은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를 통해 이루어진 것만을 합산한 것으로 다른 경로를 통한 무기 수출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러시아의 무기수출액은 이보다 더 크다는 의미임. 그는 그러면서 "북(北)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혁명들이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며 "당초 예정됐던 일부 수출품목을 지난 2년 동안 공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일어난 정권 교체 혁명으로 러시아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호스니 무바라크 전(前) 이집트 대통령과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쫓겨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이 타격을 입었음을 시인한 것임. 그는 그러나 이 국가의 새로운 지도부와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 협력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전망이 밝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 강화를 통해 북아프리카 지역의 손실 부분을 보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사이킨은 이어 지역별 무기 수출 비중과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러시아 전체 무기수출의 약 43%를 차지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24%, 라틴 아메리카가 14%, 옛 소련권이 10%,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이 2% 정도를 각각 차지한다고 소개했음.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가 여전히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 수입국으로 남아있음.

● 日 오자와 "패트리엇 배치는 난센스"(4/12)

- 일본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이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정부가 오키나와(沖縄) 주변 섬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음.
-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날 국회 내 자파 모임에서, 정부가 오키나와 주변 섬인 이시가키(石垣)에 요격용 지대지 미사일인 패트리엇을 배치한 데 대해 "북한의 로켓은 예고 없이 날아오는 건데 며



칠이나 걸려 패트리엇을 운반해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난센스"라고 지적했음. 그는 대(對)북한 외교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한층 큰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거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 오키나와대 객원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로 미뤄볼 때 일본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아주 낮다"고 말했음.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정이 약 20km밖에 안 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대응책으로는 적절치 않은 패트리엇을 배치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는 인상이다"고 비판했음. 그는 "보통이라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자위대 패트리엇 부대의 존재를 국민에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음.

● "日, 韓中日서 中日 FTA로 선회" <교도>(4/12)

- 일본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해 대안으로 중일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통상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음. 교도 보도는 중국이 현 상황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을 포괄하는 광역 FTA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 및 일본과 각각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난 4일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에 보도에 뒤이어 나왔음. 이들 소식통은 한중일이 내달 14-15일의 베이징 3국 정상회담 때 한중일 FTA 협상 착수를 공식화하려고 했으나 실현이 힘든 것으로 일본이 판단하고 있다고 교도에 전했다.
- 한중일은 지난 2010년 5월 역내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조기 공식 협상 착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음. 소식통들은 그러나 한국 내에서 산업 부품 등에 대한 대일 경쟁력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울 측이 주저한다고 일본이 판단해 이처럼 중일 FTA 추진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음. 또 오는 11월의 한국 대선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들은 덧붙였음.
- 교도는 일본이 애초 농업 경쟁력 때문에 대(對)중 FTA에 회의적이었으나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 착수를 모색함에 따라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침을 바꾼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일 FTA 협상이 시작되면 일본이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쌀과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 농업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교도는 내다봤음. 이와 관련, 일본 관리는 교도에 "중국과의 무역 자유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음.
- 르 피가로는 '한국-일본과의 동맹을 꿈꾸는 중국'이란 제목의 지난 4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일차적으로 FTA를 원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이 비록 북한을 지원하지만 자기네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려고 하지만 현재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르 피가



로는 덧붙였음.

- 르 피가로는 그러나 한중과 중일 FTA가 각각 체결되면 한중일 삼각 무역 동맹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도적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중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美해군, 차세대 줌발트급 스텔스 구축함 가시화>(4/12)

- 천문학적인 건조 비용 문제로 폐기 위기까지 몰렸던 미 해군의 차세대 줌발트급 스텔스 구축함 건조 계획(DDG-100)이 가시화하기 시작했음.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줌발트급 스텔스 구축함 건조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임.
-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능력, 최첨단 소나 시스템, 다기능 레이더, 170 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레일건에다 기존의 함정 운영 병력의 절반이 탑승하는 이 꿈의 구축함은 미 해군의 미래나 다름없다는 것이 조나선 그리너 미 해군 참모총장의 자랑 섞인 설명임.
- GM사가 건조 중인 이 구축함에 대해 찬사보다는 비난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임. 회계감사원(GMO)은 미 해군 측이 이 구축함에 필요 이상의 신기술을 통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음. 일부 해군 장교들도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는 기존의 구축함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혹평했음. 군사 전문가들 역시 연안에서 화력 지원 임무 수행 시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꼬집었음. 선체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됐음. 선체 길이만 182 m가량 돼 GM은 하는 수없이 선체 부분 조립을 위해 4천만 달러를 들여 32m 높이의 구조물을 만들었음.
- 정작 문제는 비용임. 순수 제작비용만 적당 38억 달러(한화 약 4조 3천 700억 원)나 됨. 하지만, 연구개발비용까지 합하면 적당 70억 달러(8조 5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추산임. 이런 막대한 비용 문제에 따라 애초 32척 건조 계획은 24척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7척으로 축소됐음. 비용을 둘러싼 논란에도 내년에 첫 번째 함정이 진수돼 시험운항을 거쳐 이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임.
- 그리너 총장은 줌발트급 스텔스 구축함이 확대일로인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과 중국 군사력 증강에 꼭 맞는 대항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음.

● "北인권문제는 미·한·중 공동책임" <WP>(4/13)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무관심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튿날인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게재한 첫 번째 사설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에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한 질타였음.
- WP는 "최근 모든 관심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집중된 가운데서도 수백 명의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등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다른 부분을 조명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최근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



- 가 개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세미나를 소개했음.
-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모체가 됐던 구소련의 노동수용소보다 2배, 나치 독일의 집단수용소의 12배나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인들 가운데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음. WP는 이에 대해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AI) 미국 지부장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숨겨진 강제노동수용소(Hidden Gulag)'의 제목처럼 사실이 숨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음.
- 특히 "이런 무관심의 이유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집착하면서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좌·우파 정치인들의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음. 또 북한의 이웃국가인 중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인권을 짓밟고 있는데다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면서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WP는 "정치범 수용소는 충분히 알려졌고, 무관심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유엔은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WP는 이날 국제면 주요 뉴스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하며 맨손으로 보도블록을 보수하는 북한 주민의 사진을 함께 실어 눈길을 끌었음.

● <北로켓실패> 러 "새로운 대북 제재 반대"(4/13)

- 러시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관련국들에 자제를 촉구했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러시아·중국·인도 3자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새로운 제재가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관련국들은 오직 외교·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못박았음.
- 라브로프 장관은 또 "모든 당사자가 이번 사태에 최대한의 책임과 자제력을 보이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北로켓실패> 佛언론 "中 침묵 속 국제사회 비난"(4/13)

- 프랑스 언론은 13일 북한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음. TF1 TV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비행 도중 폭발해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TF1 TV는 미국과 일본이 '도발'이라고 규정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비난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명간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력 일간지 르 몽드 인터넷판은 평양발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실패 소식을 긴급히 전하면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발사 4시간여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음. 르 몽드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은 1998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전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비난했지만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 보수 성향의 르 피가로 신문은 북한이 로켓 발사라는 도발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고립의 길로 한 발짝 더 나갔다는 미국 백악관 성명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다고 전했다. 르 피가로는 북한이 로켓발사를 한 직후 미국이 대북 식량원조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14일 긴급 소집돼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보 성향인 리베라시옹도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이 발사됐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침묵을 유지했다고 전하는 등 대부분의 프랑스 언론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실패를 주요 기사로 다뤘음.

● "美, 北 핵실험 대비 정찰기 오키나와 배치"(4/15)

-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첨단 정찰기를 오키나와(沖縄)에 배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15일 이 통신에 의하면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가테나(嘉手納) 기지에 14일 오후 정찰기 WC135기가 배치됐음. 이 정찰기는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채취해 분석함으로써 핵실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 교도통신은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가테나 기지에는 탄도미사일 관측을 위한 전자정찰기 RC135S 3대가 집결해 있는 등 북한에 대한 미군의 감시망이 강화됐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